

# 최근의 한국 언론

金圭煥  
本研究所長・서울大新聞學科 教授

## 目次

- |                        |                 |
|------------------------|-----------------|
| I. 전근대적 신문             | 言論기관의 통합        |
| II. 근대신문과 일제하의신문       | 신문과 방송의 분리      |
| 漢城旬報                   | 단일통신사—聯合통신사의 탄생 |
| 최초의 國文일간지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언론지원  |
| 併합이후의 신문               | 2. 新聞關係團體의 정비   |
| 3·1운동과 「東亞」「朝鮮」 등의 민족지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
| III. 8·15해방후의 신문       | 한국신문협회          |
| 自由黨, 民主黨治하의 신문         | 한국기자협회          |
| 신문의 企業化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
| 유신체제하의 언론              | 언론지원단체          |
| IV. 매스 미디어의 현황         | 국제신문단체의 국내위원회   |
| 두환 대통령 시대의 언론          |                 |

## I. 전근대적 신문

한국의 신문역사에 관하여 말할 경우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세계최고의 금속활자의 발달이다. 구텐베르크의 납활자가 1452년에 발명된 2백 수십년 전인 1234년 한국에서는 주자(鑄字)로 「고금상정예문」이 인쇄되었다는 기록은 한국에 있어서 최초의 금속활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경이적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W.쉬람, 「매스 커뮤니케이션」).

한국에서 전근대적 신문은 1521년에 조보(朝報)라는 관보가 발행된 것이 최초라고 되어 있다.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쿠랑(Maurice Courant)이 1850년 5월에 기록한 것에 의하면, 「1521년 漢京報(Gazette de Seoul) 혹은 朝報(Gazette de la Cour), 혹은 寄別(Nouvelles) 이라고 부르는 것이 발행되었다. 그것은 조정내의 승정원관리가 왕의 동정, 궁정의 청원, 과거의 공시, 관리의 임명을 필사하여 관리에게 배부한 것이었다. 그것을 배달한 사람을 寄別軍士로 불리었다. 이 朝報는 1577년에 이것을 인쇄판매하는 전문업자의 손으로 넘겨져서, 후에 민간신문의 선구가 되었다.」

## II. 근대신문과 일제하의신문

### 漢城旬報

근대지로서 최초의 본격적 신문은 「한성순보」인데 이것이 발행된 것은 1883년 10월 1일이다. 당시 수신사로서 일본에 건너간 김옥균은 후꾸자와(福澤諭吉)와 접촉하여, 그의 알선으로 17만엔을 빌어서 인쇄시설을 구입하였다. 일본인 井上角五郎이 신문발행인이 되어 기자 2명, 활판공 1명, 기계공 1명을 고용하였던 것이다. 이 신문은 월 3회 발행되었는데 매호 세로 9cm, 가로 25cm로 24페이지였다. 발행인이 정부의 博文局이었기 때문에 관보의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창간사에는 「開局設官, 廣譯外報, 並載內事, 頒布國中」(정부는 박문국을 설치하여 외신과 내신을 폭넓게 게재하여 나라에 그것을 배포한다)라고 말하고, 「文明開化」와 「民衆啓蒙」을 목표로 하였다.

당시의 한국의 정세는 격동하는 세계의 파도가 극동에 밀려들어오는 가운데 한국내부에서는 아직도 봉건제의 꿈속에서 지배자간에는 구한말의 당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청나라를 배경으로하는 민씨일파의 사대당과 일본의 諸政改革을 모범으로 하여 한국의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던 독립당이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獨立黨의 간부 金玉均, 朴泳孝등은 일본의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쿠데타를 단행하였다(1884년 갑신정변). 그러나 이 政變은 3일천하로 끝나고 독립당을 一掃한 정부는 事大黨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漢城旬報도 소실되어 창간 1년 후에 폐쇄되었다.

### 최초의 國文일간지

앞에서 말한 한성순보가 순한문의 旬刊紙임에 비해 순국문으로 씌어진 신문이 獨立新聞이다.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 미국에 귀화한 후 고국에 돌아온 徐載弼에 의해 창간된 격일간지였다.

이 신문은 韓英文 양국말로 쓴 최초의 민간지로서 영문타이틀은 「The Independent」였다. 독립신문이 합리주의와 근대정신에 따라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고 미신을 타파하여 民衆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고취한 공적은 한국의 언론사 뿐만아니라 근대사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신문은 1899년, 그 배경이었던 獨立協會의 탄압 폐쇄와 함께 폐간되었지만, 이 신문은 그후의 한국언론계의 귀감이 되어 창간일인 4월 7일은 「신문의 날」로 현재에도 한국의 모든 언론인에 의해 기념되고 있다.

러일전쟁(1904~5)으로 일본의 한국침략이 본격화하여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 면에서 일본의 세력이 지배적으로 되어 가고 있던 1900년대에 한국의 反日運動의 대변자로서 등장

한 것이 「大韓每日申報」와 그 영문판 「Korea Daily News」였다.

이 2개의 신문은 영국인 어네스트 베델(Earnest Bethel)이 사장으로 영국인의 치외법권 아래에서 反日言論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측도 반대론을 펼치기 위해 국문인 「大韓日報」, 「大東新聞」, 「東洋日報」, 「朝鮮日日新聞」, 「漢城新聞」 등의 신문과 英文版 「Seoul Press」를 간행하였다. 그러나 발행부수에 있어서 앞에 말한 「大韓每日申報」와 「Korea Daily News」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었다.

초대 일본총감부가 1906년 開廳되어, 초대총감 이또오(伊藤博文)을 두었는데, 그는 당시의 언론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한국내에서 신문이 갖는 세력은 놀랄만 하다. 이또오의 백마디 말보다도 신문의 한줄의 문장이 한국인을 크게 감동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는 한 외국인의 大韓每日申報는 확인될 수 있는 일본의 제반惡情에 반대하여 한국인을 선동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서는 총감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併呑이후의 신문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억제되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문지는 총독부기관지 「每日新報」만 남고, 일본어로 된 기관지 「京城日報」외에 영문 기관지 「Seoul Press」 뿐이었다. 이밖에 일본인 거류민을 대상으로 한 일본민간지 약 16종이 허가되었을 뿐이었다. 소위 무단정치하의 언론암흑시대로 불리우는 시대였다(1910~20).

일본총독부의 무단정치 아래서 허덕이면서도 한국 사람들 간에는 일본의 통치에 대한 반항이 타오르고 있었다. 마침 이때 제1차대전 이 끝나, 세계각국에서 革命이 일어나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民族自決運動이 세계 피압박민족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도 1919년 3월 1일 전국적인 反日獨立運動이 일어났다. 참가인원 200만, 사망 7,500, 검거된 인원 45,000명의 희생자를 낸 민족의 일대항거는 일본의 무력으로 결국 제압되어 실패로 끝났다.

### 3.1운동과 「東亞」, 「朝鮮」 등의 민족지

3.1운동에 의한 충격으로 일본은 무단정치를 철회하고 총독을 교체하여 새로이 문화정치라는 간판을 걸고 한국민에 대한 유화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우선 언론정책을 전환하여 총독부기관지 「每日申報」 외에 한국문 민간지 「東亞日報」, 「朝鮮日報」, 「時事新聞」 3지의 발행을 허가하였다. 그중 현재까지 계속하여 발행되고 있는 신문은 「東亞日報」와 「朝鮮日報」로, 이들은 2대 민족지로서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후의 미군점령시기(1945~1948), 이승만자유당치하(1948~1960), 장면 민주당집권시기(1960~1961), 박정희대통령시기(1961~1979)를 거쳐, 전두환대통령의 집권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대표적 대변기관을 자임하며 건

재하고 있다.

「東亞日報」는 청년실업가 金性洙씨를 중심으로 발족하였다. 1920년 4월 1일 창간당시의 스태프는, 사장 朴泳孝, 편집감독 柳權, 梁起鐸, 주간 張德秀, 편집국장에 李相協의 진용이었다.

東亞日報는 그 창간사에서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을 自任한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文化主義를 제창한다」라는 3대강령을 내걸고, 민간지 최초로 운전기를 설치하여 제작과정의 근대화와 지면의 색신을 기하였다.

총독부는 발간 후 틈도 없는 1920년 9월 「祭祀문제를 再論한다」라는 사실에서 일본황실의 상징인 三種神器송배를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정간처분이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후에도 東亞日報는 자주 정간처분을 받았는데 제 2차 정간은 1926년 3월 1일 3·1운동기념일을 맞아 모스크바국제농민협회가 보내온 동정과 격려의 전문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당시의 주필 宋鎭禹와 발행인 金鐵中이 구속되고, 신문은 1개월만 정간되었다.

제 3차 정간은 1930년 동아일보창간 10주년을 맞아 미국 「Nation」紙의 주필 비라즈가 「朝鮮의 현상下에 있어서 貴社의 사명은 중대하다」라는 축사가 총독부겸열당국이 꺼려하는 것에 저촉되어 4개월에 걸쳐 발행이 중지되었다.

제 4차 정간은 유명한 孫基禎의 일장기말살사건이다.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우승자인 孫선수의 가슴에 단 일장기를 제작과정에서 지워버리고 지면에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총독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39년까지 東亞日報를 정간시켰다. 소위 民族紙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은 이로써 종식되었다.

朝鮮日報는 경제단체인 大正實業진흥회를 배경으로 하여 발족하였다. 따라서 최초의 경영진도 단체의 중심인물인 朝鮮상업은행장인 趙鎭泰를 사장에, 발행인겸 부사장에 芮宗錫, 편집국장에 崔岡이 중요 멤버가 되어 「新文明進步의 主義」를 社是로 걸고 1920년 3월 5일 그 제 1호를 발행하였다. 타블로이드倍大版 1일 4면으로 제 1면에는 時事評論, 세계사소개, 제 2면에는 정치, 경제기사, 제 3면 사회기사, 제 4면에 文藝의 성격의 기사와 지방기사가 게재되었다.

「朝鮮日報」도 「東亞日報」와 같이 당국의 엄한 감시와 취체의 대상이 되어 1920년 8월 24일의 지면에서 「自然의 化」라는 표제로 사설을 게재, 사이또(齊藤) 총독에 폭탄을 던진 姜宇奎의 사형에 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총독부는 1주간의 정간처분을 내렸다. 정간해제후 최초의 9월 6일 지면에 또다시 「어리석은 총독부당국은 무슨 이유로 우리日報를 정간처분시켰는가?」라는 논설로 총독부를 규탄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朝鮮日報」는 복간과 동시에 제 2차 정간을 당하였다.

제 3차 정간은 1925년 9월 3일부터 12월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朝鮮과 露國과의 정치적 관계」라는 제하의 사실이 불온하다는 것으로서, 이때에는 행정조직

에 머무르지 않고 司法權까지 발동되어 집필자 辛日鎔은 체포되고 발행인 金東成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총독부가 한국인의 皇國臣民化와 국어상용(일본어 상용)을 이유로 「東亞」, 「朝鮮」양신문에 대하여 「시국에 부응하여, 자진폐간할 것을 요청한 것은 1940년에 들어와서부터였다. 결국 1940년 8월 10일 兩신문은 폐간届를 내고 그날로 폐간호를 발행하였다.

이와 같이 東亞日報는 4차, 朝鮮日報는 3차에 걸친 정간처분에 의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민족지에 대한 민중의 요망에 응해야만 하는 가시밭길을 걸었다. 일본식민지시대의 민족지는 「獨立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총독부의 施政의 대전제下에서 식민지민중의 계몽의식의 근대화, 생활의 향상, 교육·산업의 발전등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하여 민족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은 최대한으로 수행하였다. 戰後, 일본식민지시대의 민족지가 친일파였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일본당국이 언론활동을 취체하는 면에서 얼마나 가혹했던가를 실감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東亞」, 「朝鮮」양신문이 폐간된 1940년 이후 일본의 대륙침략은 본격화하여 大東亞戰爭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조선에 있어서 미디어는 완전히 일방적인 전쟁동원의 프로퍼갠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것이 총독부기관지인 「京城日報」와 「每日申報」이다. 1945년 7월말의 양신문의 발행부수는 경성일보가 375,600부, 매일신보가 253,000부였다.

### Ⅲ. 8·15해방후의 신문

일본의 패전과 그것에 의한 해방의 감격속에서 한국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항쟁이 치열해져만 갔다. 이 혼란의 와중에서 신문은 「兩後竹筍」격으로 난립하였다. 1945년말 서울에서 발행된 것만으로도 좌익지가 「朝鮮人民報」, 「自由新聞」, 「解放日報」, 「서울신문」, 「中央新聞」, 「現代日報」, 「中外日報」 등이고, 우익지는 「東亞日報」, 「漢城日報」, 「大東新聞」, 「大韓獨立新聞」, 「民衆新聞」 등이 발행되었다. 좌익신문중에는 당시 미군정 당국을 비난하고, 파괴활동을 선동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군정청은 1946년 5월 군정법령 제88호를 발표하여 그 신문들을 정간처분하고 간부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1947년 8월까지에는 언론계에 있어서 좌익세력은 붕괴하여 언론계의 주도권은 一應 민족진영(우익)이 장악하게 되었다.

1947년 11월 13일의 UN결의의 결과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어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정부는 언론계의 일대정비를 단행하였다. 정부수립후 1949년 6월 4일까지 일간신문 8, 통신사 1를 정간 내지 폐간하고 주간지 6, 순간지 2, 월간지 41를 폐간하였다.

한국동란이 발발하여 서울이 北韓의 손에 들어간 1950년 6월 27일 서울의 각 신문은 모든 시설을 놔두고 급히 서울을 탈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3개월간 임시수도 釜山에

서 신문을 발행하였던 신문사는 9월 15일의 UN軍의 인천상륙에 의해 서울을 수복했을 때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中共軍개입으로 1951년 1월 4일에는 다시 부산으로 피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부산에는 「國際新報」, 「釜山日報」, 「民主新報」, 「自由新聞」의 4개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國際新聞」은 부수 9만을 넘는 유력지였다. 서울로부터 피난온 신문은 「東亞日報」, 「朝鮮日報」, 「京鄉新聞」, 「大同新聞」, 「第一新聞」, 「中央日報」, 「平和日報」, 「大韓日報」 등이 부산에 정착하고 있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서울로 還都하게되자 피난신문들도 서울로 복귀하였다.

### 自由黨·民主黨政權하의 言論

해방직후 정부수립까지는 공산당계의 좌익신문과 민족진영의 우익지가 대항하고 있던 언론계가 부산피난시기를 포함하여 1950년에 이르던 여당의 自由黨系와 야당의 民主黨系로 확실히 양분되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獨裁專制정치로 기울어졌지만, 미국에서 半生을 보낸 사람인만큼, 신문의 자유를 존중하는데 있어서는 각별한 고려를 하였다. 특히 집권초기에 그러하였다.

1954년 현재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는 14紙로 발행부수 10만을 넘는 신문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1955년 11월 이대통령의 중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변칙적으로 통과된 이후 「東亞」, 「京鄉」, 「大邱每日」 등 야당계 신문은 일제히 反政府공격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야당계 신문의 반정부비난이 결정에 달한 것이 京鄉新聞폐간사건인데 이 사건은 1959년 4월 15일 경향신문이 국가보안법문제로 대통령을 지명하여 공격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신문은 폐간처분받았다. 경향신문폐간은 국제적으로도 파란을 일으켜 1959년 5월 IPI(국제신문편집인협회)에 제출된 韓國의 국가단위 가입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승만정권은 1960년 3월 15일 소위 부정선거사건으로 붕괴하였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서울신문」을 제외한 전신문이 모두 이승만정부의 유혈테모진압을 보도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1960년 4월 26일 사퇴하였다. 13년에 걸친 독재정권은 종식되고 새로이 民主黨정권이 들어섰다.

민주당정권은 겨우 1년도 못되게 집권했을 뿐으로 5·16군사혁명에 의해 박정희 군사정권으로 이어졌지만, 張勉정권의 제 2 공화국 아래에서 신문은 완전히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였다.

개정헌법의 제정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진 결과 1960년 3월 현재 일간지 383, 주간지 457, 월간 444, 기타 85등 일약 1,375종으로 격증하였다. 그 결과 사이비언론이 판을 쳐서 무책임한 언론은 民衆의 비난·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언론의 자유에 대신하여 언론의 책임이 강조되어 신문의 자율적 규칙이 신문인의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5·16군사혁명 직후 5월 23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포고11호에서 언론기관을 대폭 정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시설미비의 신문, 통신, 정기간행물 약 120종이 폐지되어 그 결과 일

간지 39개社, 주간지 2개社, 통신사 11개社로 줄어들었다. 1962년 정부는 신문의 單刊制(조석간 택일), 통신사의 결합(실패하였다)과 기본정책 5개條를 시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신문을 규제하는 법률, 명령등이 계속해서 公布되는 한편 反共法, 臨時特例法에 의해 신문과 신문인에 대한 탄압이 재차 시작되었다. 62년 4월 6일의 무장군인 일단의 「東亞日報」 침입에 이어서 신문인에 대한 감금, 구속이 계속되었다.

軍政하의 언론통제의 최대의 사건은 정부의 「言論倫理委員會法案」 강행의도와 그것에 대한 언론계의 반대투쟁이다. 63년 韓日協商에 반대하는 데모사태가 악화되어 서울 일원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와 같은 정황아래에서 共和黨정권은 7월 30일 언론윤리위원회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法案은 신문윤리위원회를 정부의 직접통제 아래에 두어 사소한 筆禍형의까지도 수사입건토록 한 것이었다. 이것은 신문사 자체에서 만든 자기규제기관인 신문윤리위원회를 法制化하여 정부가 그것을 타율적으로 신문을 지배하도록 한 것이었다. 신문발행인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IPI국내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등 5개 단체가 이 법안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올라가서 결국 朴대통령의 양보를 얻어내어 이 법안은 보류되었다.

언론계의 대체적인 승리로 끝난 이 사건은 그렇지만 그후의 신문과 정부의 관계를 평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에서 신문측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이 반대투쟁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던 대부분의 發行人들의 투항적 자세(최후까지 반대한 것은 東亞, 朝鮮, 京鄉, 大邱每日의 4개 신문뿐이었다)는 신문계 전체의 응집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업인으로서의 발행인들의 한계를 노출시키게 되어 言論統制를 용이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둘째로 이 法律의 시행이 보류된 이후, 언론기관이 당면한 屈折과 위축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언론의 對政府의 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新聞의 企業化

한국의 신문은 일본식민지시대보다 政論的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民族의 日帝에 대한 불만에 근거하여 反體制的 抵抗紙로서 일관하였다. 이 전통은 李承晩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政治的 센세이셔널리즘이 강하였다. 신문은 많은 적든 政治의 지도자 또는 社會의 목탁이지 돈벌이의 도구는 아니었다.

그런데 60년대 후반이 되어 국가의 近代化가 제일 중요한 슬로건이 된 결과 자본주의적 기업으로서 商業化를 표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결과 각 신문은 부수확장을 위해 出血경쟁을 전개하여 광고수입을 늘리는 반면 신문지 제작이외의 사업에 몰두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화시대의 언론은 내부시설의 확장과 인원의 증대, 關連企業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融資를 받을 필요에 직면하고 이 때문에 言論의 自由와 獨立은 크게 침해되었다. 결

국 한국의 언론이 企業化 時代에 들어간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경까지 그 성격이 서서히 權力依存型이란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

### 維新體制下的 言論

71년 4월 27일의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朴正熙 대통령은 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실시하여 維新시대의 막을 열었다.

유신체제하의 언론은 각종 法律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었다. 維新憲法밑에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계엄법, 형법, 反共法, 國家保安法, 국가보장에 관한 特別조치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와같은 법률외에 다음과 같은 행정적인 수단을 통하여 언론을 규제하였는데, 그 예로서는

① 프레스카드(Press Card)제의 실시—1925년 무솔리니정권의 기자취업등록증, 1933년 나찌정부의 발상에 기원을 둔 것으로 記者에 대한 자격심사등을 국가의 영향아래서 행하였다.

② 정부 각 부처의 代辯人제도의 도입—정부는 73년 3월부터 대변인제를 도입하여 公報양식을 一元化하였다.

③ 언론기관에 대한 협조의퇴—정부는 公報部를 통하여 특정문제에 대한 협력의퇴를 함으로써 직접적인 통제를 행하였다.

이와 같이 언론은 무엇보다도 「國民總和」 혹은 「國家安保」라는 정부의 캐치플레이즈에 따라간 결과 획일적인 보도경향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유신체제하의 한국의 신문은 戰時중의 일본의 언론통제를 방불케 하였다.

차대통령의 암살(79년 10월)에 의해 제 4 공화국이 종말을 고할 때까지의 8년동안, 한국의 언론은 自由라는 면에서는 또다시 암흑기를 맞이하였다. 고도경제발전의 이면에서 신문경영진과 기자들의 대립항쟁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70년대의 記者의 75%는 「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널리 펴뜨리지 않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고, 27%는 「센세이셔널리즘」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韓國新聞研究所 1979년 1월 조사)

## IV. 매스 미디어의 현황

### 1. 全斗煥 대통령 시대의 언론

1979년 10월 26일 차대통령의 암살에 의해 한국은 未曾有의 정치적 혼란에 빠져 들어갔다. 崔圭夏정권의 1년도 못되는 혼란기를 거쳐 80년 9월 1일 全斗煥장군이 제 5 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제 1 공화국은 1948년의 자유당정권, 제 2 공화국은 1960년의 張勉내각, 제 3 공화국은 1961년의 朴正熙정권, 제 4 공화국은 1979년의 崔圭夏내각, 제 5 공화국은



1980년의 全斗煥정권).

전두환대통령의 제 5 공화국은 「正義社會의 具現」을 시정의 대원칙으로서 슬로건으로 내걸고 政治, 社會, 經濟에 이르는 각 분야의 一大改革을 단행하였는 바, 특히 言論의 改革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언론史上 아직 실현을 보지 못했던 다음과 같은 변혁을 강행하였다.

- I. 언론기관의 난립에 의한 폐해를 막기 위한 新聞 放送社의 통폐합.
- II. 언론의 寡獨占은 公益에 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의 경영을 분리한다.
- III. 신문, 방송협회의 가맹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單一통신사의 설립.
- IV. 한국放送廣告公社의 언론지원
- V. 언론관계단체의 정비

### 言論機關의 統廢合

「한국신문협회」 및 「한국방송협회」는 80년 11월 14일 언론기관 통폐합개편에 관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합하기 위해 언론構造를 개편하여, 언론기관을 대폭 統廢合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결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는 歐美各國과 비교하여 많은 신문, 방송, 통신사가 난립하여 이것때문에 언론이 국민각계에 대하여 본의 아니게도 累를 끼치고 社會的 積弊 또한 적지 않았음을 自省하여 近代的公論기관으로서의 언론기업의 발전과 체질의 강화를 期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결과 서울에는 종합일간지 「新亞日報」가 京鄕新聞에 흡수되는 형태로 폐간되고, 경제紙인 「서울경제」, 「內外경제」가 폐지되었으며, 지방지로는 嶺南日報, 慶南日報, 國際新聞, 全南每日 4社가 他社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신문사는 중앙종합지 6, 경제지 2, 영문지 2, 지방지 10개가 되었다. 放送부문에서는 종래의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으로 二元化되었던 구조를 益우선의 公營방송 一元化체제로 전환하여 KBS(한국방송공사)와 MBC(문화방송주식회사)의 2大 네트워크로 재편성되었다. TBC(동양방송)의 T.V. 및 라디오는 KBS로 접수되었다.

또한 東亞日報가 가지고 있던 라디오 DBS(東亞放送)도 KBS가 접수하여 수도권 뉴스를 맡게 하였다. 宗教放送인 CBS(기독교방송)는 순수한 福音방송으로 限定하고 보도기능은 없었다.

KBS는 MBC의 주식 70%를 소유, 두 방송회사는 명실공히 公益放送이 되었다.

현재의 한국신문사 및 방송회사의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한국신문의 발행부수에 대하여 언급해 보기로 하자. 발행부수공개는 신문경영의 필수조건으로서 세계각국에서도 ABC 등의 公査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에서도 10수년전부터 부수의 공개발표가 절실하게 요청되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각

종 류	신 문 사 명	英 文 題 號	소 제 지	비 고
중앙지	경 향 신 문 사	Kyung-Hyang Shinmun	서울특별시	255,000
	동 아 일 보 사	Dong-A Ilbo	"	891,000
	서 울 신 문 사	Seoul Shinmun	"	415,000
	조 선 일 보 사	Choseon Ilbo	"	925,000
	중 앙 일 보 사	Chung-Ang Ilbo	"	837,000
	한 국 일 보 사	HanKook Ilbo	"	628,000
지방지	부 산 일 보 사	Pusan Ilbo	부산직할지	300,000
	대 구 매 일 신 문 사	Taegu-Maeil Shinmun	대구직할지	300,000
	경 인 일 보 사	Kyung-In Ilbo	수 원 시	
	강 원 일 보 사	Kang-Won Ilbo	춘 천 시	
	충 청 일 보 사	Choong-Chung Ilbo	청 주 시	
	대 전 일 보 사	Dae-Jon Ilbo	대 전 시	
	전 북 일 보 사	Cheon Buk Ilbo	전 주 시	
	광 주 일 보 사	Kwang-Joo Ilbo	광 주 시	
	경 남 일 보 사	Kyung-Nam Shinmun	창 원 지	
제 주 신 문 사	Cheju Shinmun	제 주 시		
경제지	매 일 경 제 신 문 사	Maeil Kyungje Shinmun	서울특별시	
	한 국 경 제 신 문 사	Han-Kook Kyungje Shinmun	"	
영자지	Korea Times	Korea Times	"	
	Korea Herald	Korea Herald	"	
방송사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서울 네트워크 22국	
	문 화 방 송(MBC)		본사: 서울 네트워크 20국	
	기 독 교 방 송(CBS)		본사: 서울 네트워크 4국	

社는 公査기관이 아닌 自社발표만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현재 廣告會社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신문용지와 잉크의 소비량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한다거나 배달원의 수로(1사람이 100부의 신문을 배달한다는 추측으로) 전체의 발행부수를 추정하는 편이다. 이것은 각 신문사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외에 한국신문경영이 前近代的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推定의 하나에 불과한 것인데, 「World Press Encyclopedia」(edited by G.T. Kurian, 1982)안에 한국인인 李재원박사가 들고있는 10大紙의 발행부수를 앞의 表의 비고란에 인용하였다. 이것은 발표된 한국의 신문발행부수로서는 아마도 유일한 자료일 것이다. 이 조사는 80년 12월 현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84년말 까지로는 각紙마다 10만~20만의 증가가 보일 것이다.

### 新聞과 放送의 분리

새로운 정부는 80년 12월 31일 言論基本法을 제정하였는 바, 그 제 3장 「言論企業과 言論

人」중 [言論企業의 兼營禁止]에서, 「누구든지 신문, 통신·방송중 2種 이상을 兼營할 수 없으며, 동일계열의 기업이 신문, 통신, 방송 중 2種 이상 기업의 2분의 1 이상의 주식이나 持分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그때까지 中央日報가 갖고 있던 東洋放送과, 東亞日報가 갖고 있던 東亞放送이 전부 公益法人인 KBS에 흡수되었다. 또한 言論基本法 제 5 장의 放送 항목에서 「개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하는 방송기업의 주식 또는 持分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방송의 公共性을 규정하고 있다. 이 非營業, 公共放送을 감독, 심의하는 목적을 가진 放送委員會가 설치되었다(언론기본법 제34조). 이것은 일본의 NHK경영위원회, 서독의 방송위원회(Runkfuntrat)와 기능면에서 유사하며, 위원은 9명으로 立法, 司法, 行政의 3명의 長이 3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방송의 公共性을 강조한 것으로는 31조에서

「①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社會正義의 진과,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 방송은 특정한 이익·집단·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같은 倫理코드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새로운 政府가 얼마나 放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국가기관이 규제하도록 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 單一通信社의 통합

通信社의 과다현상은 해방후 한국의 일반적 경향이였다. 朴正熙정부 초기에도 세계적 大통신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던 통신사가 4社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통합시키고자 하는 案이 최고회의의 「言論政策 25개조」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이래 몇차례에 걸쳐 통신사의 통합안이 논의되었지만 실현을 보는데 이르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각 통신사의 經營主가 유력한 재벌로서 그 배경에 있는 政治力을 움직여 통신사통합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通信社主는 막대한 자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政治力量을 통신사를 가짐으로써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 자체의 經營收支에 관해서는 특히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최대 관심은 AP, UPI, AFP, Reuter 등의 통신사가 계약을 국내의 어느 통신사와 맺었는가에 있었다. 한국은 베이세스—마켓트가 되어 통신료는 더욱 인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통신사는 서서히 자기정비되어 나갔다. 80년에는 UPI, AFP 2大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東洋通信」과 AP, Reuter양사와 결합한 「合同通信」의 두 회사가 양립하여 비교적 안정된 경쟁관계를 지속시켜갔다. 이밖에 時事通信, 經濟通信, 産業通信, 貿易通信 등 소위 특수통신이 存立하였으며, 또한 북한관계 뉴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內外通信이 있었다.

80년 11월 14일의 「전건언론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에 의해 통신사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단일통신사로 통합되어, 그 이름을 「聯合通信社」로 정식 발족하였다. 이 통신사는 한국

에서는 처음으로 통합된 단일통신사로 전국의 언론기관(신문, 방송)이 주주가 되는「組合式」통신사로서「協同體」통신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聯合통신사는 그 社員社인 언론기관 전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대에 뒤떨어진 통신전달수단을 現代化함과 함께 시설을 확충개선하고, 경영·편집면에서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 통신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면 창간 4주년을 맞은 聯合통신사의 주요한 업적을 보면, 우선 지방취재망의 확충을 위해 전국 63개 市郡에 122명의 기자를 상주시키는 한편, 9개 도청소재지에 支局을 통해 그것을 통할한다.

다음으로, 발족당시의 낙후된 送信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社內에 시스템개발본부를 설치하여 모리스송신 시스템에서 텔레프린트송신방식으로, 또한 무선텔레프린트에서 유선텔레타이프를 개선하여 기사의 送受信량을 대폭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해외통신사와의 제휴를 확대하여 舊통신사시대 주로 미국·영국통신사에 의존하던 것을 아세안, 아시아諸國, 中近東 통신사와도 계약하고 中共·蘇聯東歐등 공산권 여러나라의 통신사 기사도 수신하게 되었다.

또한 聯合통신사는 신문제작 CTS化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 82년 12월말 소형의 개발용 컴퓨터를 도입,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 장래 통신사에서 송신하는 모든 국내의 기사는 각 신문사의 CTS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에 의해 서울신문사가 84년부터 CTS를 도입하였다.

이제까지는 외국뉴스를 일방적으로 受信, 그것을 신문사에 신문사에 頒布하는 기능만을 맡았었던 한국의 통신사도 聯合通信의 탄생으로 국내뉴스의 해외로의 송신을 본격화하였다. 인공위성도 이용하는 외국으로의 서비스가 강화되어 외국통신사와의 뉴스교환이 확대되었다. 현재 英文텔레타이프의 해외로의 서비스는 하루 4시간 30분간이다.

### 韓國放送廣告公社의 언론지원

言論基本法의 44조의 광고방송규정에 ①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방송광고에 의한 수익은 언론의 公益사업, 언론인의 복지증진, 언론인의 연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韓國放送廣告公社는 방송광고 대행을 하여 KBS와 MBC로부터 광고료의 15%씩을 그 수수료로 하여 公社의 수입으로 한다. 이 금액은 83년의 경우 377억 원에 달하여 이것을 주로 언론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언론공익사업으로서는

- (1) 신문언론연구원(前 한국신문연구소)의 국내의 연수교육, 각종사업 및 관리운영비—18억 8천만원.
- (2) 언론인 자녀 학자금지원—신문, 방송국에 종사하는 社員의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자

- 녀의 등록금, 입학금 전액지급—20억원—
- (3) 무주택 언론인에 대한 주택자금융자—무주택 언론인에 대하여 주택매입 또는 신축자금을 長期低利 지원 (연리 6%를 10년간 거치)—5억원—
- (4) 프레스 센터 건립—각 언론단체의 통합입거와 한국언론의 상징적 건물로서 프레스센터를 신축—14억 3천만원—
- (5) 楊平수련원 건립—언론, 文化, 예술인의 연수, 교육, 세미나 및 스포츠를 위한 수련원 건립—14억 3천만원— 등이다.

신문, 방송인에 대하여 복지, 후생,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것이 明文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제 5공화국의 言論重視정책의 일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인의 「특혜」에 대해 사회일부에서 批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로서 하나는 언론인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우대를 하는 것은 똑같이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는 다른 사회人口층에 대하여 公平치 못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문기자에 대한 과도한 厚遇는 언론을 망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장은 前동양방송사장 洪斗杓씨이다.

## 2. 新聞關係團體의 정비

한국에는 해방후 57년 4월에 발족한 韓國新聞編輯人協會를 필두로 많은 신문관계단체가 조직되었다. 基幹 3단체로서 나머지 2개인 韓國新聞協會와 韓國記者協會가 있고 61년 2월 신문윤리강령의 제정과 함께 韓國新聞倫理委員會가 신문인 전체의 이름아래 발족하였다. 그밖에 신문인의 직업적 친목단체로서 57년에 寬勳클럽이 조직되었다. 그외에 신문인의 지원단체로서 省各言論文化財團, 信永연구기금, 서울言論財團이 있다. 위에서 말한 언론단체는 임의단체로서 정부의 統制를 받지 않는 민간단체이지만 제 5공화국에 들어와서 法的기관이 된 것으로 韓國言論研究院(옛 新聞研究所)이 있다. 또한 국제언론단체의 국내위원회로서 IPI한국위원회, PFA한국위원회가 있다. 각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 韓國新聞編輯人協會

1957년 4월 7일 한국최초의 민간지 「獨立新聞」의 창간 61주년기념일을 기하여 발족하였다. 이것이 한국최초의 언론인 단체로 그 목적은 「言論의 自由를 확보하고 그 伸長을 위한 사업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編輯人協會는 4월 7일 창립총회를 열어 이 날을 「신문의 날」로 정식 제정하는 외에 핵심적 투쟁기관으로 출발하였다. 동시에 이 단체는 당시의 무책임하고 제멋대로인 언론을 自己規制하기위해 新聞倫理委員會(Korea Press Council)을 全言論人의 이름으로 설립하고 초대위원장에 金世玩씨가 선임되었다. 또한 신문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韓國新聞研究所(Korea Press Institute)를 설립하고 초대운영위원장에 金圭煥씨,

소장에 洪鍾仁씨가 선출되었다. 편집인협회의 초대회장에는 李寬求씨(54.4~61.3), 2대회장 高在旭씨(61.4~66.3) 3대회장 崔錫采씨(66.4~71.1)가 취임하고 이 세사람의 지도아래 한국에 있어서 가장 권위있는 언론단체로서 언론自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韓國新聞協會

62년 10월에 「국내의 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들이 단결하여 신문경영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66년 10월 제 4차 총회에서 韓國新聞協會로 개칭되었다. 창립이래 新聞用紙대책을 필두로 구독료인상문제, 발행面數의 조정, 공로신문인의 표창, 언론관계단체보조 등을 목적으로 한 제반사업을 행하였다. 주요 결정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제 4차 총회(66년 10월)에서, 읽기 쉬운 신문을 만들 목적으로 常用漢字 3,000字를 선정하였다. ② 제10차총회(69년 10월)에서 言論自律淨化에 관한 결정사항 및 국가비상사태선언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민의 총화와 단결을 촉구하였다. ③ 제14차총회(75년 10월)에서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제정하여 倫理委로 하여금 광고윤리淨化에 착수시키는 것과 동시에 IFJ대표의 인선파견을 결정.

### 韓國記者協會

64년 소위 언론파동 중에 各社의 記者團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단체로 전국의 신문 방송 회사의 부장급 이하를 회원으로 하여, 가장 많은 회원수(84년의 회원수 2,140명)를 갖고 있다.

이 단체는 言論의 自由를 쟁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성격도 활기로 가득차 있다. 결성 다음해 기관지 「記者協會報」를 발행하기 시작하고 IEJ(국제기자협회)에 가맹하였다. 71년 孫柱煥이 제 8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동아일보기자를 선봉으로 하는 言論自由수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① 언론수호행동강령의 준수.

② 진실의 기사화.

③ 관계기관의 언론인 불법연행의 거부

④ 정보기관원의 언론기관 상주 또는 출입금지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기자협회원의 직업적 資質향상을 위해 서울大學校 新聞大學院과 함께 재교육제도를 만들었다.

73년 3월부터는 記者勞組운동의 기운이 언론계의 이슈로 된 것을 계기로 記者協會는 동아일보사장에게 공한을 보내 해고된 회사記者的 복직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記者協會는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하여 정부는 記者協會報의 폐간, 회장단의 구속등 노골적인 탄압

### 韓國新聞倫理委員會

57년 4월 7일 창설된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한국신문윤리강령을 선포하여 한국신문의 지표로 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만든 계기가 되었다. 民主黨 정권하의 소위 「무책임한 신문」 시기를 거침으로써 신문윤리강령의 제정만으로는 自律規制는 소기의 목적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61년 2월 윤리강령의 실천기구의 설립이 필요해져서 倫理委員會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영국의 Press評議會나 스웨덴의 옴부즈만을 모범으로 한 것으로 신문의 誤報등으로 피해를 받고 고통을 입었던 사람으로부터 提訴를 받아 그것을 조사심의함과 함께 委員會가 제소를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심사할 수 있게끔 하였다. 신문사가 받는 制裁로서는 주의, 비공개경고, 공개경고, 정정, 취소, 제명(위원회로부터의)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각 新聞社의 발행인 편집인 주필, 편집국장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항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각 新聞·通信社는 題號아래에 「본신문은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要項을 준수한다」라고 나타내고 있다.

### 言論지원단체

省谷言論文化財團—신문, 통신 및 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자질향상을 기하는 것과 함께 언론 및 文化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65년 9월 22일 발족한 法人으로, 주로 언론인의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金成坤 전東洋通信社사장의 私費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의 운영위원장은 英文紙「Korea Herald」사장 韓鍾愚씨이다.

74년부터의 해외수학자 數는 미국에 2명, 일본, 프랑스, 홍콩에 각 1명이다. 65년부터 83년까지사이의 유학자수와 大學이름은 다음과 같다.

東京大學 17명, 콜롬비아大學 26명, 하버드大學 2명, 베를린大學 1명, 파리大學 10명, 홍콩大學 9명, 慶應大學 10명, 미주리大學 3명 계 78명

寬勳클립信永연구기금—77년 9월 언론인의 연수, 저술, 출판, 그의 文化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1억원으로 창립된 基金이다. 현대건설 鄭周永씨의 회사로, 78년 1918만원, 79년 2,300만원, 80년 2,630만원, 81년 3,060만원, 82년 3,870만원, 83년 4,470만원이 언론관계출판,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현재의 대표자는 桂光吉씨.

서울言論財團—78년 3월 大宇그룹대표 金宇中씨의 설립금 10억의 출자로 발족된 社團法人이다. 언론인의 해외연수 지원과 언론단체행사 지원 및 언론인 국제교류 지원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이사장은 전文化公報部장관 金聖鎭씨이다.

### 국제신문단체의 국내위원회

한국이 가맹하고 있는 국제신문단체는 IPI, FIEJ, IFJ, PFA, OANA 등이 있지만 정식으로 국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IPI와 PFA가 있다. IPI와 한국언론계의 관계는 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해 한국은 국가단위의 가맹을 신청하였지만 신문발행이 舊法에 의해 허가제로 되어있던 이유 등으로 개인자격의 加入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民主黨정부가 수립된 다음해인 61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한국은 국가단위의 가맹이 실현될 수 있게 되어 수십명의 發行人, 編輯人이 총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61년 2월 11일 국내위원회가 설치되어 초대위원장에 韓國日報사장 高張基榮씨가 취임하였다. 이후 동아일보사장 故高재욱씨, 조선일보사장 方一榮씨가 위원장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61년 신문윤리위원회 설치, 64년 언론파동때 IPI는 한국언론계에 충고와 격려를 주었다. 현재의 위원장은 聯合통신사장 鄭宗植씨.

PFA 국내위원회—67년 PFA 발족당시부터 한국은 주요 멤버로 일본과 함께 참가하였다. 특히 75년 본부이사장에 金相萬 동아일보사장이 취임한 이래, 신문기자의 훈련, 신문인의 전문적 직업적 지식의 향상, Data Asia, Depth News의 刊行등 아시아의 언론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가 컸다. 한국내에서의 Asia신문재단의 사업은 국제賞인 高在旭언론기념상을 제정하여 아시아 여러나라로부터 격년으로 편집부문의 우수한 언론인을 표창하고 있다.